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6 | 2025.05.26 (2025.05.19~2025.05.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분야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들과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하는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4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는 휴지기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 본격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9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1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13
-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 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1인) 1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14
-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1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16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의원 등 11인) 1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4인) 1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0인) 1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대선으로 인한 국회 휴지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6 (2025년 5월 3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 본격 추진

- 의료, 제조, 물류 등 16개 과제 선정
-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 전환 촉진

2025-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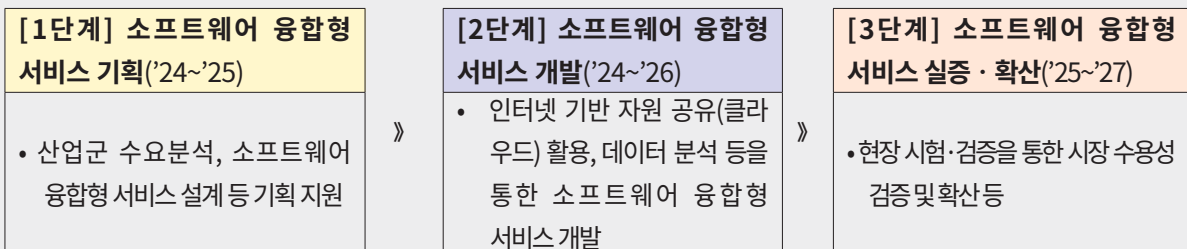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힘

* XaaS(X(산업) + as a service) :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절차·가치 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사업 모형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은 각 산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지원하며,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모형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를 개발함. 3단계(실증·확산)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

< 단계별 지원 구조도 >



지난해 1단계(기획) 지원을 받았던 3개 과제가 올해 2단계(개발)로 진입했으며, 2단계(개발) 지원을 받은 4개 과제는 3단계(실증·확산) 후속 지원을 받음. 혁신적이고 참신한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신규 과제 공모를 진행하여 기획 6개, 개발 3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선정된 과제들은 의료, 제조, 무역, 축산, 돌봄, 농수산업 등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 통합 공유(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 신속히 적용 가능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 선도 모형(XaaS 선도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하여,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산업통상자원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본격 추진

- ‘AI 반도체 협업포럼’에서 수요기업과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협력 MOU 체결
-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분야 맞춤형 AI 반도체 풀스택 개발·실증
- 수요기업이 기획 참여, 국내 팹리스·SW 기업과 공동개발 및 시장개척 나서
- 프로젝트는 예타 절차 등을 신속히 밟아, 빠르면 내년도 예산 투입 추진

2025-05-20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분야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들과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이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디바이스(제품)에 탑재되어 클라우드와 서버 연결 없이도 AI 추론 연산이 자체 가능한 반도체로 ①실시간 연산, ②높은 보안성, ③낮은 네트워크 의존성, ④저전력 등이 강점

반도체 산업 지형은 수요 제품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판도가 크게 바뀌어 왔음. PC, 모바일 시대를 거쳐 지금은 Chat GPT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시대’에서 개별 디바이스(제품)별로 맞춤형 AI가 탑재되는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놓여 있음. AI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AI 반도체 수요도 기존 범용·고성능에서 수요 맞춤형·최적화로 전환되는 추세임. 산업 전 영역에서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시장은 현재 지배적인 강자가 없어 글로벌 AI 판도를 역전시킬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음

우리 산업은 자동차·가전 등 업종별 AI가 접목될 디바이스 분야와 칩을 제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을 보유 중임. 산업부는 우선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계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구성해,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동 프로젝트는 4대 분야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SW, 모듈, AI 모델 등을 풀스택으로 개발·실증하는 사업임.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수요기업이 기획에 직접 참여했음. 4대 분야 수요기업들은 국내 팹리스, SW 기업들과 드림팀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AI 반도체와 SW를 개발·실증하고, 나아가 탑재와 양산까지를 목표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풀스택 개발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계획임

지난 6개월간 산업부는 산업 파급효과와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해 동 프로젝트에서 우선 지원할 4대 업종을 선정했음.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분야를 선정해 193건의 기획 수요를 접수 받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대 업종 6개 세부 개발과제(안)을 기획했음. 현재 1조원 규모로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동 프로젝트는 우리 AI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제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팹리스와 SW 기업의 경우 대규모 수요가 창출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업종별 수요기업들은 제품에 최적화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탑재해 제품의 첨단화를 달성하고, 대외 AI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국내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20 시행

경제자유구역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관광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유치산업에 핵심전략산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사항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사업비의 증감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경미한 변경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고시하는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20 시행
---------	---------------------------------	---------------

산업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기업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5-23 시행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로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과거에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가스열펌프를 새롭게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종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었던 각 경과규정상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25-05-20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20 시행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20 시행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함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으면 연속하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공시된 적이 없고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인 지정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감사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20. ~2025.06.30.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19. ~2025.06.30.
---------	------------------------------------	-----------------------------

2015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0년간 유지되었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급증으로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과 관련한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3(소기업 규모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전화: 044-204-7454, 팩스: 044-204-7679)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21. ~2025.07.01.
-------	--------------------------------	-----------------------------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7,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2.
~2025.07.01.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와 측정·분석능력 인증으로 이원화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평가제도를 정도관리로 일원화 (안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0조)
- ②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제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5조)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025-05-19 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 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안 제66조의2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	2025-05-19 발의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2025-05-21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19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25-05-21 발의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안 제98조 및 제99조)

정무위원회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5-22 발의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舊「상품권법」이 폐지되었음. 이후 상품권의 발행업체 및 발행방식, 종류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발행규모 및 상품권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舊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 상품권 시장의 성장과는 반대로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5-19 발의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8조)**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2025-05-20 발의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6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5-05-2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의원 등 11인)

2025-05-20 발의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4인)

2025-05-21 발의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닐 경우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5-05-21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2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2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2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대선으로 인한 국회 휴지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26(월) 10:00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	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26(월) 10:00	디지털이 강한 소상공인 : 민생 경제회복과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9(목) 10:00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군(軍) 운영이 필요한가? : 인구절벽시대 K-방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군(軍)의 무인무기체계 발전 방안 세미나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5/29(목) 14:00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윤종오·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5/30(금) 10: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이용우·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5/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2호(2025-9호) 발간	국회도서관	
	5/28(수)	「금주의 서평」 제730호(2025-21호) 발간		
	5/26(월)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5/27(화)	「NABO Focus」 제110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19(월)	「Data+」 제9호(2025-9호)	국회도서관	
	5/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1호(2025-8호)		
	5/21(수)	「금주의 서평」 제729호(2025-20호)		
	5/21(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0호(2025-10호)		
	5/21(수)	「Data&Law」 제29호(2025-4호)		
	5/21(수)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35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22(목)	지적재산권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5/23(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6 (2025년 5월 3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